

#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[한근수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30.

발 의 자 : 한근수, 김지훈(국), 원주영,  
김동훈, 전해연, 이수련, 이정애,  
정현미, 김지훈(민), 박은경

### 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다.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·운영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### 5. 관련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##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이동노동자”란 대리운전기사, 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,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.
2. “이동노동자 쉼터”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동노동자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
2.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
3.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·복지 서비스 제공

4.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

5.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# 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4조(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제5조(재정지원)

①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운영방안 미정으로 비용 추계를 할 수 없음

### 4. 작성자

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

**☑ 「근로복지기본법」**

**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